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6. 7. / (총 14매)			
중양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정 혜 은 윤 민 수	전 화	044-202-3575 044-202-380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044-200-2293 044-200-2295
중양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팀	팀 장 담 당 자	한 상 균 이 웅 채		044-202-3232 044-202-3238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과 장 담 당 자	류 용 래 배 문 성		044-200-4430 044-200-4438
중양재난안전대책본부 격리지원반	팀 장 담 당 자	이 병 철 전 종 형		044-205-6511 044-205-65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전자출입명부(KI-Pass) 시범사업 중간 결과 보고,
▲방문·다단계 방역 현황 및 조치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전자출입명부(KI-Pass) 시범사업 중간 결과 보고, ▲방문·다단계 방역 현황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고령층의 감염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어르신들이 모이는 행사나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집합관촉 행위는 엄중 단속할 것을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에 지시하였다.
- 또한, 내일부터 전학년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교 방역의 최대 고비가 올 수 있는 만큼, 교육부와 방역당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방역상 허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코로나19에 대응한 병원들이 최근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료계와 소통하여 추가 지원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5월 24일(일)부터 6월 6일(토)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단계적으로 실시*되었고 방역 관리에 철저히 노력한 결과,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로 전파되는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 ①우선 단계(고3, 5월 20일), ②1단계(초1~2, 유치원, 중3, 고2, 5월 27일), ③2단계(초3~4, 중2, 고1, 6월 3일), ④3단계(초5~6, 중1, 6월 8일)

- 다만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이 여러 다중시설을 거치며 연쇄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어, 수도권외의 경우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

- 특히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교회 소모임, 방문 판매회사, 탁구장 등에서 산발적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 지난 2주간 신규 확진 환자는 1일 평균 39.6명으로 이전 2주간(5월 10일~5월 23일)의 23.2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 치료 중인 환자 수는 951명(6월 7일 0시 기준)으로 지난주와 비교하여 증가하였으나, 병상 등 치료 인프라가 부족한 수준은 아니다.

- 다만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 비율은 8.7%로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5월 10일 ~ 5월 23일		5월 24일 ~ 6월 6일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3.2명		39.6명
집단 발생 ¹⁾ (신규기준)	5건	⇒	19건
감염 경로 불명 비율	6.5% (21/325)		8.7% (48/554)
방역망 내 관리 비율 ²⁾	80% 미만		80% 미만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 · 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등교 수업의 재개는 우리 사회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를 위해 헌신한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119 구급대, 학부모들과 학생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렸다.

○ 또한 국민의 생활 방역 노력과 방역 당국의 추적으로 대규모 확산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있으나, 방역 당국의 추적 속도가 확산 추이를 따라잡지 못하여 환자 발생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 특히 이러한 감염 전파가 대규모의 밀폐시설에서 밀집된 군중에서 이루어질 경우 급격한 유행 확산을 우려하였다.

- 이에 국민이 모든 생활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핵심 원칙이며, 거리 두기의 단계와 상관없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와 함께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취약시설들을 선제적으로 찾고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해외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 노동집약적 사업장(도축장), 이민자 숙소, 교정시설 등

-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약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집단감염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다.

- 발견한 사각지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 맞는 생활 방역 세부 지침을 수립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기획 현장 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장 점검과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취약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게 하고, 방역수칙 미준수기관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엄격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2 전자출입명부(KI-Pass) 시범사업 중간 결과 보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 시범사업 중간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본 사업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 방역 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례에서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됨으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전자출입명부 도입)하기로 하였다.
- 이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 본 사업 도입에 앞서, 6월 1일(월)부터 6월 7일(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지정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앱 개발상황을 점검하고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였다.

○ 시범사업 추진 결과, 16개 시범지정시설에서 3,170명의 출입 기록이 전자적으로 수집되었으며(6월 7일 0시 현재),

- 시범지정시설로 지정된 16개 시설 외에 287개소의 시설에서도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참여하여, 2,881명의 출입 기록이 추가로 수집되었다.

○ 시범 사업 중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전자출입명부의 이용 방법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못해 일부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홍보영상, 카드 뉴스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 정보처리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또한 6월 8일(월)과 9일(화) 이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합동 교육(영상회의)을 실시하여, 담당자들의 전자출입명부 관련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② 시범 사업 기간 중, 일부 고령층이 전자출입명부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 네이버(NAVER) 외에 PASS(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고, 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③ 아울러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의무대상시설에 적용 사실을 사전 통보하고, 본 사업 도입 후에도 6월 30일(화)까지 제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상의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6월 10일(수)부터 전국적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업을 개시하고,

- 시설관리자 대상 교육, 안내를 통해 전자출입명부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보급하여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의 추적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전자출입명부 도입으로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했다.

3 방문·다단계 판매업 방역 현황 및 조치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문·다단계 판매업*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조치계획을 논의하였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하여야 함, 2019년 말 기준 시·군·구 신고 방문판매 업체는 16,965개소이며 시·도 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138개소

○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판매 분야는 집합 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 수단으로 하므로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뺏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하고 잠적하므로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환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한 문제가 있다.

- 6월 7일 0시 기준 총 45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관악구 방문판매업체는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통해 영업해온 미등록 업체이다.

○ 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직접판매협회, 다단계 공제 조합 등을 통하여 집단홍보 자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 준수 등 감염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 관할기관에 신고·등록된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를 자제하도록 하고, 불법 미신고 업체의 영업활동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또한 요청(6월 5일)한 바 있다.

- 이에 더하여 정부는 내일(6월 8일)부터 6월 19일(금)까지를 불법 방문 판매업체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방문·다단계 판매업의 방역을 더욱 강화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건강 기능식품 홍보관,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구매를 유인하는 방문 판매 활동을 집중 점검(6월 8일~6월 19일)하도록 요청하였다.
 - 점검과정에서 불법 ‘뺏다방’ 등 노인층 대상 홍보 판매 활동이 확인 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 및 경찰 수사의뢰 등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와 노인단체 등에 노인층 대상 집합 판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과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코로나19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직접판매 업계 회의를 개최(6월 8일) 하여 방역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직접판매 분야 특성을 반영한 생활 방역 세부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불법 방문판매 업체 홍보관 방문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건강상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 특히 어르신, 기저 질환자 등의 감염 취약계층이 불법 방문판매 업체와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한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4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6월 6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시설 6,738개소, ▲종교시설 1,727개소 등 총 23,774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14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7,824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73개반, 1,075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663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4,161개소 중 이격 거리 위반, 명부 작성 및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27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 현재 15개 시·도 16,776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어제(6월 6일)까지 위반업소 92개소를 적발하여 82개소는 고발하였고, 10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 6월 6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1,92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0,87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1,048명이다.

- 3,304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344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0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6월 6일)는 1명이 낚시를 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것을 확인하였고, 고발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07명이며, 이 중 81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26명이 착용하고 있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51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55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6일) 입소 221명, 퇴소 168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21명

-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착용법
8.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10.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홍보자료

붙임1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붙임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